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따른 재정지원 확대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  
문화바우처 사업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 등도 촉구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경남 통영에서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바우처 확대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이유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며 “예산 확대 및 문화소외계층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문화바우처 법 신설”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4월,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하고 2022년까지 2만 명 신규 충원계획도 세운 상태”라면서 “그런데 국가직 체계로의 제도적 변화에도 처우개선은 물론 인건비조차 대부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가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경남 통영에서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연 가운데 시도 의장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자료요구권이 없어 안전 관련 자료수집이 어려워 안전검토 등 제 기능 발휘가 어렵다”며 “전문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위원의 정책 전문성 제고

및 검토보고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위원 자료요구권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가장 친일친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 안장 친일반민족 행위자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왼쪽부터 김정수(익산2), 나인권(김제2),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 송성환 도의장, 홍성임(민생당 비례), 이명연(전주11), 두세훈(원주2) 의원.

## 도의회 의원 6명, ‘우수 의정 대상’ 수상

김정수 · 나인권 · 두세훈 · 박희자 · 이명연 · 홍성임 의원  
자치입법 · 정책 제안 활발, 주민참여 기반 확대 앞장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 김정수(익산2), 나인권(김제2), 두세훈(원주2),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명연(전주11), 홍성임(민생당 비례) 의원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8회 우수 의정 대상’을 받았다.

우수 의정 대상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해마다 전국의 광역의원 중 활동이 돋보인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과 정책 제안, 지방자치에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한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열리지 않았으며, 상패는 지난 19일 오전 도의회 의정실에서 송성환 의장이 전달했다.

김정수 의원은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방안 마련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와 5분발언을 하는 등 의정활동을 벌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기업 및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조례 제·개정도 추진했으며,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

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풍부한 전통과 콘텐츠를 보유한 전북의 문화를 진흥·발전시키기 위해 문학진흥추진회를 발의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에 다문화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두세훈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과 정책 제안, 지방자치에 주민참여 기반을 높이고 생활안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박희자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북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마을교육생태계를 구축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난독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전북교육청에 학생안전관리를 강화할 것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의 부실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명연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과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공공

보건의료 및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1회용품 사용 억제와 악취관리, 석면관리, 자원순환 등 환경보호를 위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 및 개정했다. 에너지저장장치 연구단체를 이끌어 에너지정책 전환 촉구활동도 벌였다.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비해 전북도에 공공기관 이전 전담조직 강화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성임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전북도의 인사와 조직관리 예산편성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뒀다. 특히 생활안전 기본조례를 발의해 안전환경 구축에 관심을 촉구했으며, 전북지역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북도 기록관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도민들이 응급상황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전남 세금 징수를 위해 전북도청내에 체납징수 전담팀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발전,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과 적극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성환 의장은 “지난 한해동안 민생을 살피는 활동에 앞장서주 감사하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조국 기소, 개혁 반발로 보는 시각 있다”

재판부, 검찰에 경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부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반격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검찰에 주의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3차 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 한 특수성이 있다”며 “사건 면담은 자칫 잘못된 경우 진술 회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웠던 ‘증인 전 검사실에서의 조사’에 대한 언급이다.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전직 청와대 특별감

찰반임 이모씨는 법정에서 서기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다시 확인했다는 질문에 수긍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이인걸 전 특검반장도 증인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확인했다 했고, 이씨도 같은 말을 하자 재판부가 이를 지적한 것이다.

검찰이 “본인이 조서를 확인하고 싶다 했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재차 “신청해서 보는 건 좋은데 검사님과 같이 보는 게 허용되나”라고 물었다. 이후 재판부가 “검찰을 오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 검찰에서는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참고인들이 본인 진술을 확인하고 싶어 열람 신청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당사자주의적 성격이 강해 재판 전 여러 차례 만나 확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다른 사건과 달리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도 이런 점을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장 말씀에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고 유도처럼 예민한 사건에 있어서 지적한 부분에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증인과 접촉을 독점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면 공정한 재판이 침해된다. 신빙성과 관련해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 제7회 전주한옥 품바명인전

2020년 6월 27일(토) 오후 7시  
전주 흥남문 광장

주 최 | (사)전북문화진흥원  
주 관 | (사)전북문화진흥원  
후 원 |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JJC(지방자치TV)전북총국  
문의전화 | 전주매일신문 업무국 063) 283-9700